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서

① 사 건	인행심 2020 - 082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②이름	고 승 구	
	③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서당길 11	
선정대표자· 관리인·대리인	④이름		
	⑤주소		
⑥ 피청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⑦참가인	
⑧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⑨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3. 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⑩ 이 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0. 5. 25.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24. 피청구인에게 ‘인천공무원 갑질 사건(연수구 옥련2동) 감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3. 4.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3. 6.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이 사건의 징계처분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제6호 다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9. 6. 발표한 「갑질 근절 추진방안」에 따르면 갑질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행위유형, 내용, 징계처분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힌 바, 연수구청은 이러한 정부방침에 성실히 따라야 할 것이다.

가해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는 이 청구에서 논외로 하더라도, 징계처분결과 공개는 각종 이익형량 시 충분한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정 조치라고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수행 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법령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무원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는 공개될 경우 개인적 또는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개인생활 및 사회생활,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해당 공무원은 이미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을 통해 누구인지 알려져 있는 상태로 해당 정보에서 성명 등을 지우고 공개하더라도 누구인지 예측이 가능함에 따라 감사결과에서 개인정보를 분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이 사건 정보공개로 제3자가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의 공익이 더 크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공공분야 갑질 행위 공개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은 법령에 의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20. 2. 24. 피청구인에게 ‘인천공무원 갑질 사건(연수구 옥련2동) 감사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20. 3. 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사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20. 3. 6.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다. 판 단

1)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항 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은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을 증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정 조치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의 원인이 된 사건이 공공분야 갑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비공개 결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담당공무원이 받은 구체적인 감사처분결과에 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의 불명예스러운 정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 등을 검토하여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한 것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